

‘성동지하차도 철거’ 찬반 팽팽... “지하상가 반대” 한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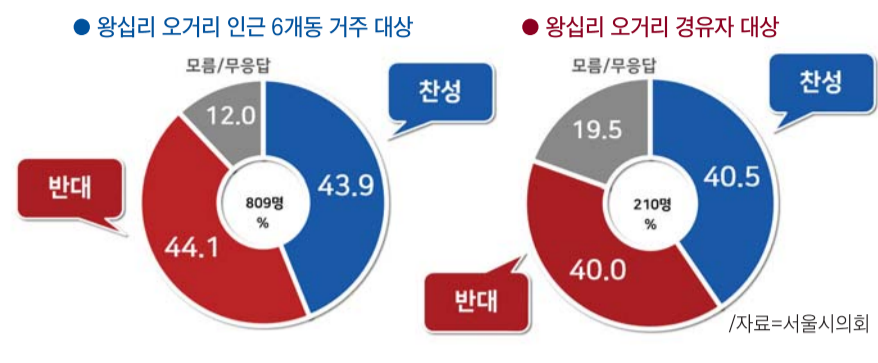
서울시의회 거주자·경유자 설문
주민 반대 44.1% > 찬성 43.9%
경유자 찬성 40.5% > 반대 40%
찬반 여론 오차범위 내 차이 적어
평면 교차로는 상대적으로 ‘긍정’

성동 지하차도 철거를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하차도 철거 후 지하상가를 조성하는 방안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61.5%로 찬성(29.3%)을 압도했다.

1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성동 지하차도 철거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반대 44.1%, 찬성 43.9%로 찬반 여론이 오차 범위 내로 비슷했다.

왕십리오거리는 비효율적인 차로 운영과 지하차도 전후구간 차량의 상충·엇갈림으로 지하차도가 차량 통행에도움이 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시의회는 지역 주민과 왕십리오거

〈성동 지하차도 철거에 대한 찬반 여론〉



리 거주자를 대상으로 성동 지하차도 철거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총 두 번에 나눠 진행됐다. 첫 번째 조사는 작년 11월 19~20일 성동구 도선동·왕십리2동·행당1동·행당2동·마장동·사근동에 거주하는 성인 809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4%포인트다. 두 번째 조사는 2018년 11월 18~21일 왕십리오거리 경유자 210명을 대상으로 현장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6.8%포인트다.

성동 지하차도가 오거리의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공감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지역 주민들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왕십리오거리 경유자들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왕십리오거리의 성동 지하차도는 2개 차선을 점유하고 있다. 총 10개의 교통흐름 중 1개 방면에만 도움을 줘 오히려 오거리의 교통정체를 유발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왕십리오거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의 36.9%가 성동 지하차도가 교통 정체를 일으킨다는 의견에 대해 공감하지 않았다. 공감은 36.5%로 오차 범위 내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왕십리오거리 경유자의 경우 공감은 43.3%, 비공감은 36.7%로 집계됐다.

성동 지하차도 철거와 관련해서는 주민의 44.1%가 반대에 찬성 의견(43.9%)을 소폭 앞섰다. 왕십리오거리 경유자의 40.5%가 찬성했고, 40%가 반대했다.

철거 후 지하상가를 조성하는 안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오거리 경유자 모두 반대 의견을 냈다. 왕십리오거리의 지역 발전을 위해 성동 지하차도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상가를 만드는 방안 대해 시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인근 주민의 61.5%가 반대에 찬성 의견(29.3%)을 크게 앞질렀다. 오거리 경유자의 경우 63.3%가 반대했고, 24.3%가 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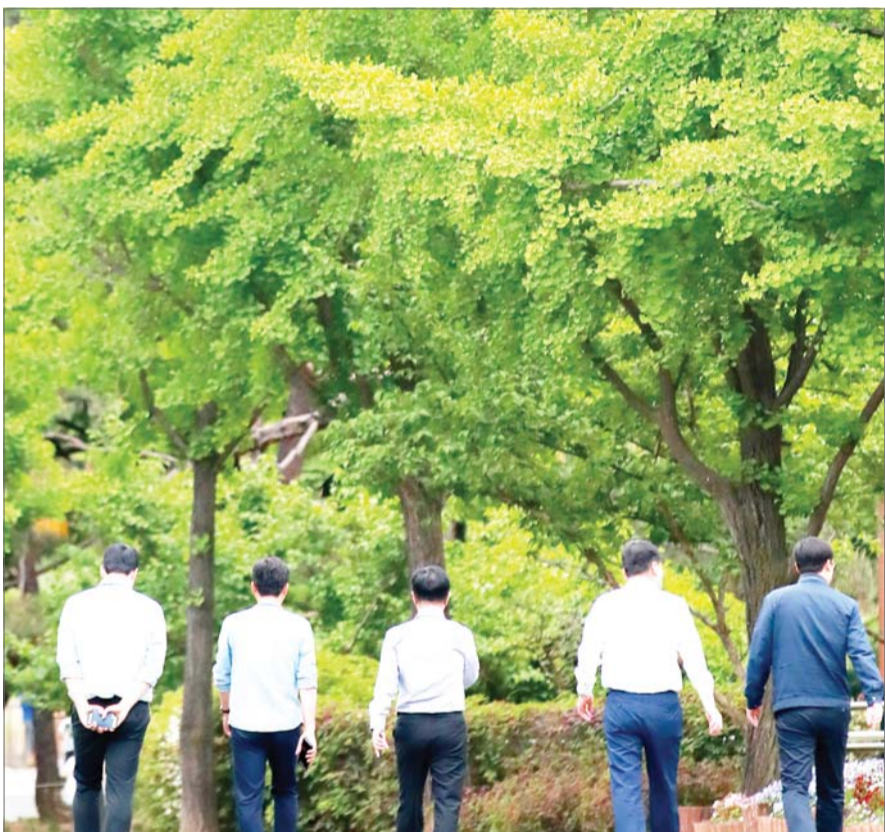
조사 대상자들은 지하차도 철거 후 지하상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했지만 평면교차로 설치 제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왕십리오거리의 지하차도를 없애고 해당 공간을 댔은 후 주차 차선을 확보, 평면 교차로를 만들자는 의견에 주민 10명 중 5명(49.9%)이 동의표를 던졌다. 반대 의견은 35.5%로 집계됐다. 오거리 경유자들은 45.7%가 찬성, 41%가 반대했다.

시의회는 “성동 지하차도가 교통정체를 유발한다는 의견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다만 평면 교차로 전환에 대해서는 찬성이 우세한 양상”이라며 “성동 지하차도를 철거한 후 지하상가를 설치하지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가 60%로 대부분이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역발전”이라는 지하상가 조성의 이유를 제시한 상황에서도 반대 여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상가 조성 시 적지 않은 반대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추진을 중단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아, 아쉬운 점심시간” 구름이 별을 가리며 20도 안팎의 포근한 날씨를 보인 13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초여름 날씨에 ‘폭염 취약계층’ 지원 강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서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이달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날 폭염·폭우 등 여름철 재해와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폭염, 수방, 안전, 보건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2019 여름철 종합대책’을 내놨다.

특히 올해에는 노인, 쪽방촌 주민, 노숙인, 최종중(독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책을 강화했다.

시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로당, 복지관, 복지시설, 동주민센터 등 4069곳에서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일반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폭염특보 시 연장 쉼터는 오후 9시까지, 야간 쉼터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운영된다.

쪽방 주민과 노숙인을 위한 무더위쉼터는 쪽방상담소,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운영한다. 독거어르신 안부확인 서비스 및 동자동 쪽방촌 겨울의류·침구류 세탁과 진공포장 서비스 확대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여름철 위생을 강화한다. 7~8월 동안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입소자 1만898명을 위한 여름철 냉방비(시설운영비, 1인당 1천원)를 지원한다. 폭염기간 최종중 독거 장애인의 24시간 활동지원 가구는 기존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린다. 돌봄 공백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야간순회 방문서비스를 제공해 무더위에 지친 장애인을 지원한다.

우기에 접어들기 전인 6월까지 침수 취약지역 8곳(강남역, 사당역, 길동 일대 등)에 빗물펌프장을 증설하고 하수관거 등 방재시설을 정비한다.

/김현정 기자

2022년까지 ‘나눔카 1만대’ 서울 누빈다

서울시 ‘나눔카 3기 사업 계획’ 발표
주차구역 확대하고 편도서비스 도입

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승용차 공동 이용 서비스인 ‘나눔카’를 1만대로 확대해 차량공유 시대를 앞당긴다.

서울시는 13일 나눔카 이용 지점과 차량 수 확대, 편도서비스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나눔카 3기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24일까지 3기 사업자를 모집하고 5월 말까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시는 이번 3기 사업을 통해 나눔카를 1만대로 늘리고 기존 2개 사업자(쏘카, 그린카)를 3~4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나눔카 주차 공간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 공영주차장과 공공 부설주차장에 최소 1면 이상을 나눔카 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나눔카 주차면이 없었던 공영주차장 55곳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102곳 등 최소 157면 이상의 나눔카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민간 건물에서도 나눔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부터 실시한다. 나



나눔카. /서울시

눔카 주차면 설치 시 기업체에 제공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감감률을 현행 1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청년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는 나눔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내년부터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대상자 중 창업희망자 250명을 선정해 6개월간 나눔카 이용료를 30% 할인해준다.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할인액은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린다.

2020년부터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네카’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한다. 시는 본인 소유 주차장을 나눔카 주차면으로 제공하면 나눔카 이용 때 할인 혜택을 줄 예정이다.

시는 나눔카 차량 1대당 일평균 이용 횟수가 1, 2회 밖에 되지 않아 이용 효율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이용자가 나눔카를 대여한 장소에 다시 반납해야 하는 왕복서비스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 차량을 돌려주는 편도서비스를 실시한다.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나눔카 주차면을 통합 편도존으로 운영한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지역화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과기부 공모사업 선정... 125억 지원

경기도가 과기정통부에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은 금융, 환경, 문화 등 10개 분야 국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3년간

총 1516억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총 44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공모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라는 주제로 참여해,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돼, 3년간 최대 125억을 지원받게 된다.

도는 올 초부터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아임클라우드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데이터 센터로 참여하는 9개 기관과 함께 과기정통부의 공모 참여를 준비해 왔다.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면 지역화폐 사용내역을 통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품을 소비하는지, 지역경제의 흐름과 소비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각 센터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융합 분석해 소상공인과 복지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